社 說

'민주적 선출방식' 대학민주화의 초석

—— 총장선출 논의에 즈음하여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

80년대의 암울한 5공치하에서 억눌렸던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는 87년 6월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민주화의 물결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대학도 민주화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대학의 민주화는 자율적인 대학운영과 이에 걸맞는 행정·관리방식의 민주화를 모체로 한다. 즉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동의하에서 대학이 운영되어야 하며,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총·학장의 직선이 학원민주화의 요체가 되는것이며, 많은 대학에서 적잖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총·학장 직선제를 제도화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자신들의 고통을 감내하는것을 볼 수 있었다.

이즈음 우리대학도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대학의 민주화와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의 상징적 표상인 총장

사실 지난 80년 학내사태로 인해 긴 나락에 빠졌던 경희의 현대사를 염두에 둘때 총장의 임기만료라는 전환기를 맞는 우리는 두려움과 고뇌가 앞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에 앞서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학내 일각에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논의들을 주목하여 이에 몇가지 제언을 구하고자 한다.

대학의 총장은 명실상부한 대학의 상징적 표상이며, 지도자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대학행정의 책임자이며 경영자일뿐 아니라 학자로서 교수들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총장의 위상은 문교당국이나 사학재단의 영향력에 독립적일 때 그 권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대말 모든 대학에서 실시했던 총학장 직선제가 대학내의 학연과 지연등의 대학내 파벌조성과 과열선거운동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 임명제로 바뀐이후 대학의 자율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그로인해 대학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짓밟혔는가를 회상한다면 총장의 민주적 선출이 대학민주화의 초석임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 대학의 총장이란 자연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의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의 표상'이기에 그러할 뿐더러,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행위자체가 민주국가에서 삶을 영위해 갈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총장선출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최근 타대학들에서 재단에 의한 임명이나 소수의 참여에 의한 총장선출로 빚어진 소요사태는 결국 민주주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학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소수의 학교당국자들에 의해 총장이 선출되었을 때 대다수의 교수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교수사회 내부가 파벌과 알력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예도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서 보아왔다. 특히 어느대학처럼 파행적이고 비도덕적인 재단에 의해 임명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서 총장자체가 심각한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되고 대학이 대학구성원들의 강한 불신을 받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선출된 총장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와 형식의 문제다. 다시말해서 어떤 총장을 선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로 선출하느냐가 관건인것이다. 대학사회는 어느 한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의해 이끌려 가는 단세포적인 집단이 아니며, 총장의 권위와 대표성은 제도와 형식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대학의 경우 아직까지 선출방식의 윤곽조차 결정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w 태에서 구체적인 선출의 방법과 총장후보의 자격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총장선출의 민주적 절차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될 당위의 요청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으며, 이점은 '학원민주화'라는 교훈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대학에서는 그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경우 직선제의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여태까지 총장 직선제라는 제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에게 총장 직선제는 낯설고 서툰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더우기 현총장은 설립총장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한 열정과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두고볼때 참으로 고개숙여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이글에서 우리는 결코 현총장에 대한 개인적 음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어느 인물이 유임될 것이냐, 혹은 교체되어야 할 것이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출과정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가령 서로의 의견대립이 무서워 직선제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다면 다양성속에서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획일적인 전제사회를 옹호하는 나약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민주적 선출방식은 '당위'

누누히 강조하건데 중요한것은 총장직선제는 시대적인 추세요, 대학민주화의 요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립대학들이 직선제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일부 국립대학에서도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남들이 한다하여 우리도 해야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직선제의 당위성이 입증된 마당에 우리대학만 시대적 추세에서 이탈한다면, 대외적으로 웃음거리이며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것이다.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고심끝에 채택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는 당연한 제도적 절차로 정착된 총장직선제를 지엽적이고 극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회피하려는 과오는 없어야 할것이다.

또한 언젠가는 도려내야할 상처라면 더 악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려내는 것이 혼란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총장선출은 대학민주화의 핵심이며, 상징으로 이 제도의 형식이 지향하는 최종목표가 대학의 민주화라면 이에 역행하는 발상이나 태도는 과감히 버려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삼 수백세를 이어갈 경희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과연 어떠한 과정과 제도가 경희정신에 합당한 것인지를 모든 경희인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랄 뿐이다.

'범죄전쟁' 이면에 가려진 정치권의 범죄

—— 구조적 폭력에 유린된 정치도덕

民意 저버린자가 부르짖는 범죄에 대한 응징

도덕성 회복해야 할 정치권의 통치논리

사론

I

최근 횡행하는 사회범죄를 보노라면 한장의 지옥도를 연상케 한다. 그 죽임의 대상에 노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범행방법의 잔인함은 입에 담기 어려운 지경이다. 더욱이 그것들이 단순히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하여 버젓이 저질러 진 것이라는 사실에 접했을 때 느끼는 곤혹감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어지간한 범죄라면 자본주의 아래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인간소외의 현상이라느니, 마약 복용으로 인한 수성(獸性)의 발동이니 하는 식으로 따져 보기도 하겠지만 근래의 잔악한 범죄들 앞에서는 교언(巧言)이 무색하게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자들을 '찢어죽일 놈들'이라고 핏발 선 증오로서 처단한다고 할 지라도 참혹을 극한 범죄들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

가히 극약 처방이라고 할, 그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마당에 버젓이 저질러지는 이 상상을 초월할 만행은, 그런 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되고, 따져져야 할 문제이다. 이는 돌려 말해서 최근의 범죄들은 단순히 경찰이 적발하여 처단하는 '형사적 사건'의 수준에 대응하여 파악할 단계가 이미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이는 다시금 범죄뿐 아니라 각종 사회 비리와 정치적 부패등 전반적 위기현상이 단순히 정치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에서 제 각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거꾸로 우리 사회란 이제 정치, 사회, 경제등 각 전문 분야가 소재적으로 병렬하듯 구성된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각 부문이 상호관련되어 작동하는 '유기체적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현재의 정부 부처의 구성은 정치부문, 경제관련 부서, 사회관련 부서로 소재적으로 병렬되어 있다. 말하자면 국가내의 문제들에 소재별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은 문교부가, 범죄는 내무부가 맡는 기능적 전문화는 단순한 사회에서는 그나마 유용하지만, 점차 복잡하고 분화되는 사회에서는 사회문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전체적 측면을 사상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

범죄의 경우만 해도 이렇게 다발적이고 그 정도가 이다지 심각한 데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단순한 검·경찰의 소관일 수가 없다. 그것은 사회, 경제, 문화등 사회전반에 대한 '몸의 이상 신호'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설 경우 우리는 정치를 단순한 하위체제(Sub System), 즉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간의 한 구성요소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항상성(honeostasis)을 견지하는, 그리고 사회의 각 부문은 오히려 정치라는 몸체의 구성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 정치란 단순히 대통령, 국회의원등으로 구성되는 통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삶과 문화적 양식, 사회적 관습등을 규정짓고 또 균형잡는 요체로 드러날 것이다. 요컨데 인간이 정치성 동물(Phisei Zoon Politikon)이라면 인간의 삶은 곧 정치적 삶이요, 따라서 각종 사회비리와 범죄 또한 정치적인 범죄로 포괄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지배자가 '꾀하는 것'(有爲)이 있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지배자가(자기 생활을)풍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老子 道德, 75章)

노자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할 점은 정치와 사회혼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다. 그리고 사회문제라는 자물쇠는 정치인들이 욕심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그 나름의 처방이다. 우리가 老子의 말을 케케묵은 것으로 내팽겨 칠 수 없는 것은 오늘의 사회혼란과 정치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광주학살을 자행한 정치적 사건과 스스로 목숨을 가볍게 여긴 분신자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을 이을 수 있다면 남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쉽사리 죽이는 행위도 역시 정치적인 것이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권력쟁탈의 비도덕성은 단순히 도덕적 혐오감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의 무규범성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3당통합 이후 지난 한해 동안 정치는 중요한 두가지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하나는, 정치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당위적 인식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이요, 또 하나는 정치적 행위는 결코 생산적 행위가 아니라는 확신이다. 3당통합과 내각제 개헌의 공방속에서 그들은 대표성을 가진 공인이 아니라는 사실, 즉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조절자가 아니라 정치판이라는 시장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적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편 그들은 정치는 생산적 노동을 결코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다. 즉, 노동을 통해 자본을 획득하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달리 그들은 하는일 없이 국민들의 생산물을 수탈하는 기생적 존재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비도덕성은 정치와 폭력세력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고, 그들의 기생성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둘러 싼 추한 밥그릇 싸움에서 극명하게 폭로되었다.

공모한 내각제 각서가 천하에 드러났을때도 '정치인의 신뢰' 운운하는 저 낯 뜨거운 짓거리 속에서, 밤새 서로 죽일 궁리만 해 놓고 아침에는 당사에서 분주히 웃는 낯으로 악수해 대는 저 철면피들 속에서, 또한 이따위 짓들이 정치 행위인 줄 아는 무지한 자들 속에서 놈들은 몇 푼의 유흥비를 위해 그 어린것을 참혹하게 죽여 놓고도 유유히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를 뇌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럴진데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지배자가 자기 생활만을 풍족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숲言을 어찌 논리의 비약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초개와 같이 불사를 수십명의 분신자살자들의 '죽음'이나, 남의 목숨을 파리같이 여기는 비인간적인 '죽임'이 어찌 5·6共의 지배자들로 인해 저질어진 政治的인 것이 아니라 할 것인가!

III

그렇다면 '범죄와의 전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범죄를 잉태시키는 뿌리를 두고 가지만 쳐대는 만화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조직 폭력을 끼고 행하는 정치가 어찌 조직 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 격앙된 심사를 누르고서 끝으로 고사한 도막을 인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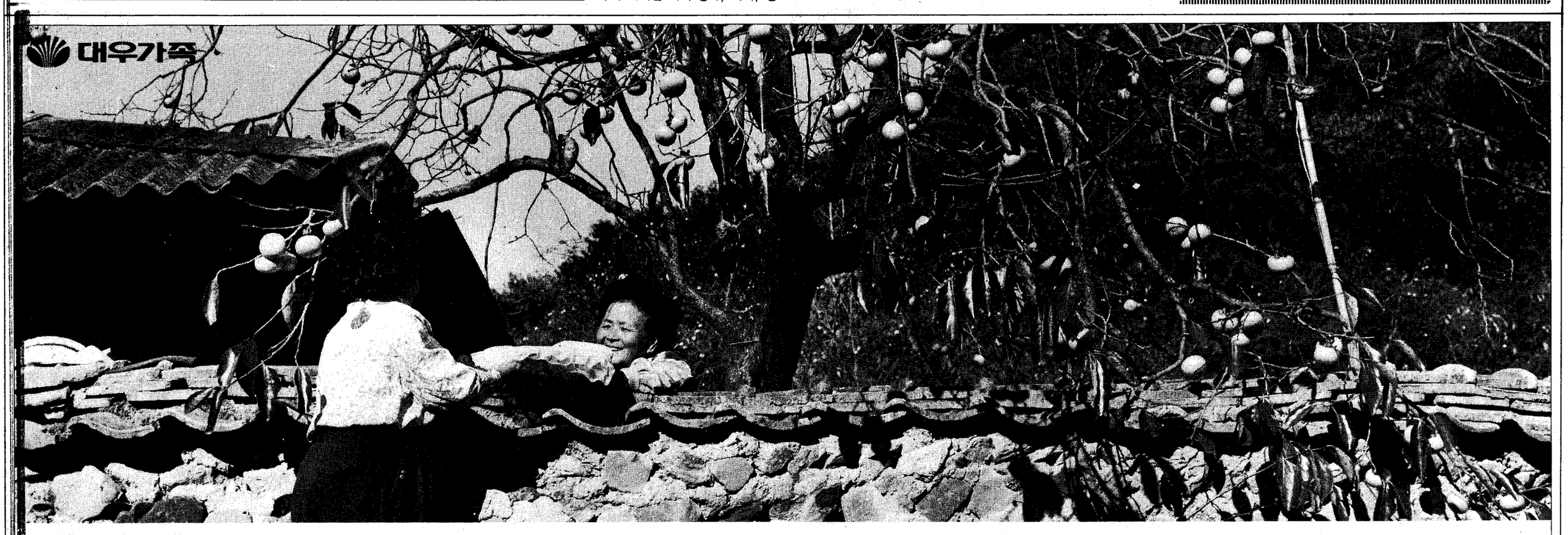
구한말 세도가이던 민씨네 사랑방에 3정승이 모여 앉아 전국을 뒤흔드는 소요사태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가운데 한 정승이 내린 처방 曰, "모가지 여덟은 날려야 겠소"이다. 8도관찰사에게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다. 이때 민씨네 식객으로 있던 젊은 이상재가 이말을 듣고 던지는 말씀 曰, "여덟까지 갈 것 있소? 모가지 셋이면 될껄! 너희 3정승이 져야 할 책임을 왜 애꿎은 아랫 것들에게 넘기느냐"는 통렬한 일격이다.

결론은 분명한 것이다. 칼날은 국민들을 향해 겨누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스스로의 목에 겨누어야 하는 것이다.

배 병 삼
〈 본교 박사과정·정치학 〉

대우가족



'나누는 손길이 있어 더 넉넉한 우리들의 삶'

"서울 큰 아한테 햅쌀 부친다더니 나락은 찧었는가?"
가을볕 가시지 않은 얼굴로 안부를 물어오는
이웃의 따뜻한 말에서 올해도 포근한
겨울을 기대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참깨도 털어놓고, 호박·가지도 말려두고,
햇곡식으로 떡이라도 넉넉히 빚어
힘들 때마다 시름 함께하며
스스럼없이 도와준 이웃에게 인심도 건네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한해는
작은 인정을 나누는 손길 속에 저물어 갑니다.

씨뿌리고 애써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저 들판앞에서
다시 씨뿌릴 봄을 기약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닿아있는 뿌리이며,
서로 아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끝없는 사랑의 터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서,
이 땅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60